

학교 비정규직 파업... 교총 “법 개정해야”

급식조리사 오늘 동시 파업
파업기간 급식대란 불가피
내달엔 돌봄 2차파업 예고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안돼
학생 피해... 노동법 개정을”

서울시내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19~20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다.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과 20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 2000여 명이 속해 있다. 이번 파업은 주로 급식조리사가 참여하며 이밖에 도 행정실무사, 에듀케어 강사 등 조합원 중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서울학비연대는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하는 학교비정규직

/뉴스

대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교육공무직 1만 7000여명 중 약 70%가 DC형에 가입돼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DB형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800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기존채용자 DB형 전환 및 신규 채용자 DC형 적용 ▲혼합형(DC형 50%+DB형 50%)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기존 채용자와 신규 채용자를 편 가르기 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혼합형의 비율도 5대 5가 아닌 D B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19~20일 파업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과 20일엔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결국 파업 기간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거나 빵·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돌봄 파업 시에는 학생이 방과 후 자신의 교실에 있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에는 돌봄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돌봄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내달 초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고, 교육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이은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떠안게 되자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고, 교원들이 파업의 뒷감당을 하는 희생 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학교 파업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중소, 신입 증발 현실화 세자릿수 채용 ‘전무’

올 한해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모집규모는 대체로 한 자릿수를 넘기지 못한다고 확인됐다. 인크루트가 ‘2020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 536 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올해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채용한 기업 비율은 67.0%로 지난해 85.5% 대비 18.5%p 감소한 것으로 대조를 보였다.

이들 기업에서 채용한 신입사원 규모를 자릿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한 자릿수 채용) ‘0명대’가 74.8%로 지배적이었다. 이에 비해 (두 자릿수 채용) ‘00명대’는 22.7%로 3분의 1 이상 줄었고, (세 자릿수 채용) ‘000명대’는 고작 2.5%에 불과했다. /이현진 기자

기업 절반 “채용때 외모 본다” 평가 영향 女가 4배이상 많아

직무 역량과 관련 없는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기업 372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5.6%)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자기관을 잘 할 것 같아서’(55.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고객, 거래처와 대면 시 유리할 것 같아서(43%)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30.4%)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21.3%)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12.6%) ▲부지런할 것 같아서(12.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외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성별로는 ‘여성’이 26.6%로 ‘남성’(6.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차이 없다’는 응답은 67.1%였다. /이현진 기자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민관합동 ‘K-동맹’ 결성

산업부-지자체-현대차 등 맞손
산학연 전문가 40여명 표준제정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결성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개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산업부와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등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을 하는 4개 지자체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자동차, 표준개발 협력기관인 한국표준협회 등 7개다.

자율주행차 데이터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교통신호 등의 인프라에서 수집·활용되는 정보 데이터를 말한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는 미래차 확산전략 목표 중 하나인 ‘2024년 자율주행 레벨4 일부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재 지자체들은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서 미국 단체 표준을 참고해 데이터를 수입하고 이를 활용해 추돌 방지, 사고 알림, 정체 정보 알림 등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표준은 근거리 통신 ITS(지능형 교통 체계)용으로 개발돼 미래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해 뒤 미래차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인 ‘M,비전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문에 지자체별 실증사업 성과가 전국단위 자율주행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을 제정해 호환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 국가기술 표준원과 표준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자율주행차데이터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하며 데이터 표준개발, 표준제정 및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실증단지에서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된 국가표준을 실증사업에 적용하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차는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 실증단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국산 밀 자급률 1%... 10%까지 올린다

농식품부, 2030년까지 확대 계획

정부가 ‘제2의 주곡’인 밀 산업 기반 육성에 본격 나선다.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향후 10년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식용 밀 국내 수요량은 연간 215만 톤 수준(최근 5개년 평균)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 톤(자급률 1% 내외)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곡물 수출제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곡물을 자급·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면적 3만 ha, 생산량 12만톤)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년) 기간내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은 5000ha로 2025년까지 3만ha로 6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1만 5000ha)까지 조성해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신대 장준하통일관 개관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한신대

‘개교 80년’ 한신대, 장준하통일관 개관

한신대는 지난 17일 ‘장준하통일관 개관식 및 돌베개공원 개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신대 졸업생인 장준하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언론인, 민주·통일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했

다. 이번 행사는 장준하 선생의 서거 45주년과 한신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한신대는 기존의 ‘60주년 기념관’ 건물을 ‘장준하통일관’으로 명명하고 1층 로비에 ‘장준하기념홀’과 ‘장준하 기억의 방’을 조성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21일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바비엘 II 그랜드블룸에서 ‘삶을 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은 국정과제인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최초의 포럼이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지역 초·중학생 대상 드론 교육

세종대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과 자율비행체 ICT융합전공은 지난 14일 대양AI센터 플라보랩에서 지역 초·중등학생 30여명을 초청해 창의융합교육 ‘DRONBIE STEAM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대는 지난 3년간 학내 재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 사고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연계·융합전공 교육을 운영해 왔다.

세종대와 한국창의과학재단은 융합교육을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소개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드론 작동에 필요한 기초 과학·수학·기술 지식 습득 ▲참가자가 직접 자신만의 드론 설계 및 디자인 ▲드론 활용 미래 창업 아이템 기획 등이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